

“Clean KPX” 부패없는 kpx 구현을 위한

2014년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

2014. 2.

전기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전력거래소

목 차

I. 2013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성과	1
1. 청렴도 측정 결과	1
2. 반부패경쟁력 평가 결과	2
3. '13년도 반부패·청렴활동 주요 추진실적	3
II. 2014년도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4
1. 국내의 부패인식 및 반부패노력도	4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7
3.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환경	9
4. 2014년도 권익위 중점 추진업무	10
III.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16
1. 경영환경 분석 및 주요 추진과제 도출	16
2. '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목표체계	17
IV. 2014년도 세부추진계획	18
1. 부패방지 인프라 강화를 통한 청렴·윤리경영 구현	18
2. 반부패·청렴 추진활동 인센티브 강화	21
3. 부패 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22
4. 부패·비리신고 활성화 및 점검 강화	25
5.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26
6. 청렴교육 활성화	30
V. 실행과제별 추진일정	33

I 2013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성과

1 청렴도 측정결과

□ 연도별 평가결과

구분	2010	2011	2012	2013	준정부기관 평균
종합청렴도	Ⅱ등급(우수) 9.05	Ⅱ등급(우수) 9.02	Ⅱ등급(우수) 8.83	Ⅲ등급(보통) 8.42	8.35
외부청렴도	9.12	9.37	9.24	8.69	8.58
내부청렴도	8.85	8.27	8.00	8.20	8.14

□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 전년대비 내부청렴도가 상승한 반면, 외부청렴도의 하락으로 종합청렴도는 보통(Ⅲ)등급으로 하락
 -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간접경험률이 전년도 0%에서 2.13%로 증가하여 외부청렴도가 예년보다 크게 하락
 - 경영진의 적극적 청렴의지 및 다양한 반부패 추진노력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인사, 예산부담집행, 부당업무지시 등 지속적인 취약항목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 주요 취약항목

- 외부청렴도 : 금품·향응수수 간접경험,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 업무 투명성
- 내부청렴도 : 인사관련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 및 영향인식, 부당 업무지시 빈도, 업무추진비/운영비/사업비 부담집행

○ 개선방안

- 외부청렴도
 - 계약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기준 및 계약 정보 공개 등 투명성 확대
 - 부패의명신고시스템, 예산낭비신고시스템 운영 등 신고 활성화
 - 계약 관련 불만사항 또는 애로사항 점검 및 해소를 위한 클린콜 시행
 - 계약대금 지급 등 업무처리기한 준수 등 계약관리업무 점검 강화
- 내부청렴도
 -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취약분야 업무프로세스 및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인사 청탁, 예산부담집행 방지를 위한 상시점검 및 청렴문화 확산활동 강화
 - 자체청렴성 평가 등을 통해 고위직 중심의 청렴 솔선수범 및 청렴의식 향상 추진

2 반부패경쟁력 평가 결과

□ 연도별 평가결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가등급	Ⅳ등급 (미흡)	Ⅲ등급 (보통)	Ⅲ등급 (보통)	Ⅱ등급 (우수)

- 공공기관 Ⅳ그룹(300~500인) 25개 기관중 4위 수준('12년 32개 기관중 21위)

□ 항목별 평가결과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점)	득점 (90.24점)	
반부패 의지 노력 (90%)	① 반부패 인프라 구축 (4개 단위과제)	청렴인센티브, 자체감사 활성화, 부패처벌 기준 강화 등	13.5	13.5
	②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3개 단위과제)	행정투명성·신뢰성,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	13.5	12.78
	③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4개 단위과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취약분야 집중개선 등	31.5	25.59
	④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3개 단위과제)	기관장·고위직 반부패 의지,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18.0	17.51
부패 방지 성과 (10%)	수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2개 단위과제)	행동강령 위반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13.5	12.49
	①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정도	3.0	2.23
	②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사건 발생 정도	7.0	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감점)	반부패시책 추진협조(청렴도평가 감점)		총점의 30%이내	-0.86

□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 다양한 청렴인프라 구축 및 정보공개 확대, 권고과제 적극이행 등으로 청렴도평가의 부진에 불구하고 우수(Ⅱ)등급으로 향상
- 주요 부진항목
 - 자율 개선과제 및 취약분야 집중개선 과제 추진 (부패연관성, 효과·창의성), 감사부서의 주요업무 참여제도 및 운영실적,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등
 - 청렴도 평가시 신뢰도 저해행위(호의적 응답 유도)로 인한 감점
- 개선방안
 - 부패취약요인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취약분야 개선 및 자율시책 추진과제 발굴
 - 자율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직원 청렴 참여 및 의견 수렴 체계 강화
 - 고위직의 솔선수범 노력 및 간부 대상 청렴의식 개선활동 강화

3 '13년도 반부패·청렴활동 주요 추진실적

□ 체계적인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대 Action Plan 수립 시행(1월)
- 청렴포탈시스템 “청렴마당” 구축 운영 등 직원 참여도 개선 추진(4월)
- 익명신고시스템(Help line) 도입 및 운영 홍보를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6월)
- 금품수수에 대한 『One Strike Out제』 기준 및 적용 강화
 - 10만원 이상 능동적 금전수수시 해임요구토록 징계양정세칙 개정(10월)
- 부패 사전 예방을 위한 청탁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패신고자 보호시스템 강화

□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

- CEO 및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및 현장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식 제고(연중)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KPX 청렴순례단” 운영 및 청렴 입사식 시행(9월)
- 청렴슬로건, 청렴 Idea(Do 10, Don't 10), 청렴수기 공모 등 청렴경진대회 개최(10월)
- 청렴주간(Every Clean Week) 운영(3월~12월)
 - 매주 청렴스토리·청렴메시지 공유 및 행동강령 퀴즈, 청렴자가진단 시행

□ 부패영향평가 및 취약분야 자율개선 추진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범위 확대(9월)
 - 공개대상(1직급 팀장 및 지사장 포함) 확대 및 공개 내역 구체화
- 승진시 청렴성 다면평가 등 인사분야 청렴성 검증 강화(9월)
- 채용관련 아웃소싱 확대, 심사위원 on-line평가, 일정 단축 등 채용프로세스 투명화
- “청렴회의시간제(Clean Meeting Time)”, “청렴식권제” 도입(4월)
- 임직원행동강령의 구체화 및 행위기준 추가 보완(10월)

□ 부패 취약분야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e-감사시스템 구축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3월~)
- 연중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운영(6회)

II 2014년도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1 국내외 부패인식 및 반부패 노력도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담보상태

< 청렴도 점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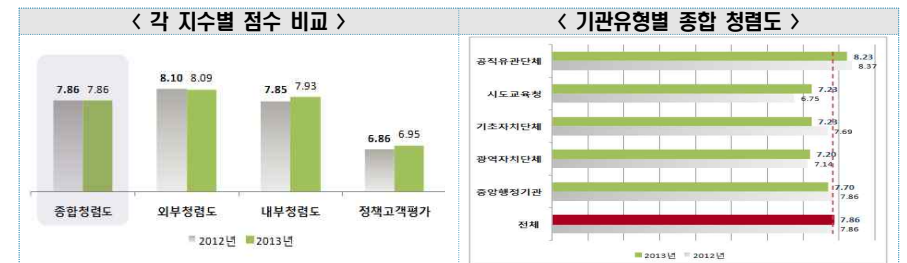
※ '08년·'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시계열 단절,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9점/0.57점 하락

- 20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등의 부패경험은 개선되었으나, 청렴문화·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

※ 개선 :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1.0%→0.7%), ▲ 위법·부당 예산 집행(9.5%→6.2%), ▲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경험(8.0%→6.6%)

하락 :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점→6.82점), ▲ 조직내 알선·청탁·압력 행사 정도(8.68점→8.44점), ▲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7.72점→7.24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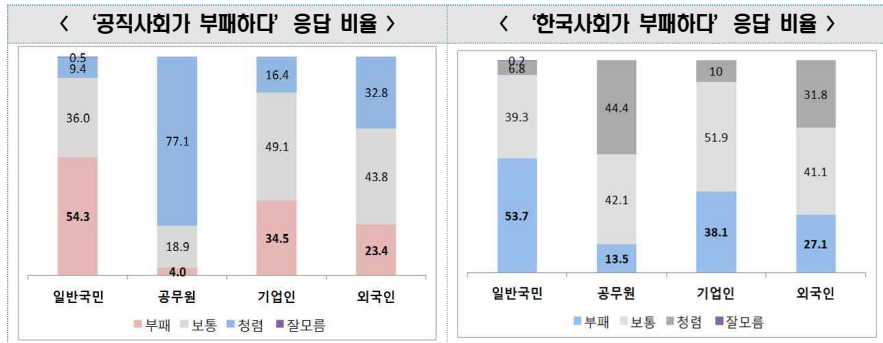
- 외부청렴도(8.09점) 및 내부청렴도(7.93점)에 비해 정책고객평가(6.95점)가 낮은 수준으로 연고주의·신고자보호 등에 대한 인식 저조



□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1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공무원·외국인은 '청렴하다'는 의견이 다수

-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직자간 현격한 인식 격차(13.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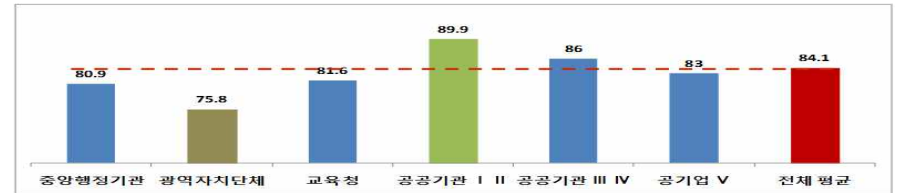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55.2%), 공무원(42.9%), 기업인(56.6%), 외국인(45.5%), 외국투자기업(49.3%) 모두 '우리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 (부패 발생 주된 원인) 공무원들은 ① 공직내부의 부패유발적 문화 및 관행(28.6%), ② 민원인의 청탁 유혹 등(24.5%), ③ 공무원의 윤리의식 결여(20.9%) 순으로 응답
- (직접 경험한 부패행위) 일반국민은 '금품수수'(23.1%), 공무원은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및 이권개입'(25.0%), 기업인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3%), 외국인은 '적대·항응수수'(26.7%)가 많았다는 응답
- (정부정책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 기업인(52.9%), 외국인(41.4%), 외국투자기업(33.3%) 모두 '정책과정에서 불법 로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며, '정책의 잦은 변경·수정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외국투자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 각급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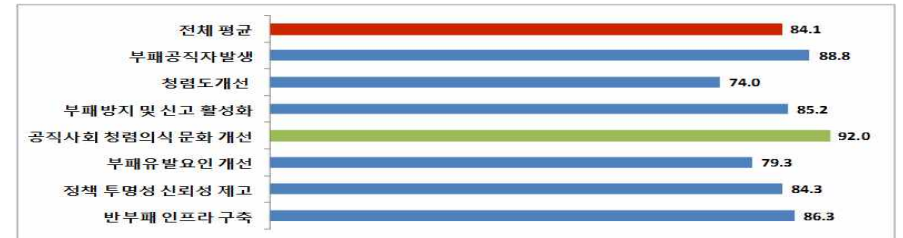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 평균 점수 >



* 공공기관 I·II 임직원수 천명 이상 48개, 공공기관 III·IV 임직원수 300명 이상 42개

- 평가부문 중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부문(92.0점)의 노력도가 가장 높았고,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79.3점), '청렴도 개선' 부문(74.0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부문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평균) >



- 최근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은 반부패 시책 추진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이 우수
- 연속 미흡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율적 제도개선 및 청렴의식·문화 개선 등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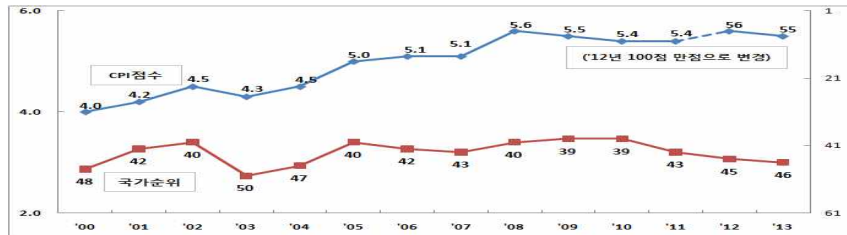
※ 3년 연속 우수기관 : 공정위, 병무청, 부산시, 대전시교육청, 조폐공사 등 36개 기관
3년 연속 미흡기관 : 대구광역시, 강원도교육청 2개 기관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3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 중에서 46위

○ '12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가 1단계 하락('12년 176개국 중 45위)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8.6점)에 비해 13.6점 낮음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2013	1위 (91점)	1 (91)	3 (89)	14 (76)	19 (73)	22 (71)	38 (60)	40 (59)	46위 (55점)	69 (43)	80 (40)
2012	1위 (90점)	1 (90)	1 (90)	17 (74)	19 (73)	22 (71)	41 (58)	30 (65)	45위 (56점)	72 (42)	94 (36)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 수준

< 아시아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부탄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2013	5위 (86점)	15 (75)	18 (74)	31 (63)	36 (61)	46위 (55점)	53 (50)	80 (40)	94 (36)	94 (36)	102 (35)	114 (32)	116 (31)
2012	5위 (87점)	14 (77)	17 (74)	33 (63)	37 (61)	45위 (56점)	54 (49)	80 (39)	94 (36)	105 (34)	88 (37)	118 (32)	123 (31)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3년도 국가경쟁력(GCI*)은 전년 (19위)보다 6단계 하락한 25위 기록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7위), 공공자금의 유용(62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7위)로 모두 하락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WEF 국가경쟁력지수	13/134	19/133	22/139	24/142	19/144	25/148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44	100	111	128	133	137
공공자금의 유용	27	46	56	58	58	62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	-	51	49	50	57

* GCI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3년도 세계경쟁력평가(총 60개국)는 전년과 동일한 22위를 기록

○ 부패 관련 평가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4단계 상승, 정부투명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정부효율성 분야(70개 항목) :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사회적 제반여건 부문

< 부패관련 세부평가 결과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MD 국가경쟁력	31/55	27/57	23/58	22/59	22/59	22/60
정부효율성	37	36	26	22	25	20
뇌물공여와 부패비리(설문)	30	29	29	30	32	28
정부의 투명성(설문)	35	37	27	26	29	29

□ 정치경제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3년도 국가부패지수는 아시아 17개 국가 중 10위로 여전히 답보 상태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점수	6.30	5.65	4.97	4.88	5.90	6.90	6.98
순위/전체대상국	8/13	7/16	7/16	6/16	9/16	11/16	10/17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3 2014년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 ('14. 1. 1, 대통령 신년사)
-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4. 2. 5. 권익위 업무보고)

-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패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제대로 개선하고, 이를 전 분야로 확산하여 국민신뢰 회복
- 정부가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고질적인 횡령·부정수급 빈발 우려**
 -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적발·처벌 차원의 대응을 넘어 **재정누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 추진
- 「비정상의 정상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비리가 집중 부각되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개선 활동을 적극 알려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도 개선의 전기를 마련

4 2014년 권익위 중점 추진업무

- '3대 중점 분야' 비정상적 부패 관행 근절에 역량 집중

- 국가재정 누수 비리에 대한 종합적인 차단장치 강구
-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정상화**
-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분야 개선

- 권익위와 각급기관 합동으로 '3대 중점분야' 집중 개선

-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역량을 집중, 실질적인 개선 추진
 - ※ 청렴정책, 부패영향평가, 법·제도개선, 행동강령, 부패실태점검, 공익신고 등
- (공공기관) 각급기관별 특성에 맞게 '3대 중점 분야'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
 - 추진 결과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실적으로 제출

가.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

-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정보 분석·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 공직유관단체 자체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요청(부패방지 시책평가 가점 반영)
 - 「복지부정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차단 방안 강구
 - 기관 홈페이지(연결 배너설치) 및 자체 홍보 매체(전광판, 홍보물, 반상회보, 사보, 고지서 등)를 활용한 홍보

-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 기관별로 예산집행, 각종 재정지원 분야 등에서 예산낭비나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연중)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국가재정 누수 부패' 집중 개선 추진(연중)
 - 추진결과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실적 제출

나.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정상화

- 부패행위자 처벌시스템 정상화로 공직부패 신상필벌 원칙 확립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 비위행위자 징계 감경금지 명문화,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하여 자의적인 처벌 관행 차단

- 권익위 권고사항, 공공기관별 우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 기관별 자체 적발 노력을 제고하고, 적발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
 - 기관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 감경 제한, 형사고발 기준 등 내부 기준을 철저히 준수
 - ※ 횡령공금 반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관대한 처벌 지양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 강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채용예정자에 대한 비위면직 여부 필수적으로 확인
-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통보(상·하반기 각 1회)

다. 구조적·고질적 비리분야 개선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 (공직유관단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기관 특성에 맞게 방만경영 정비 추진(추진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 제출)
- 공공기관 방만경영 빈발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집중 추진(권익위)

방만경영 중점 점검분야(예시)

- 대학교 학자금 등 과도한 교육비 지원
- 가족 무상 건강검진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 경조사비 예산지원, 고가 기념품 등 지급
- 특별채용·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 행위
- 퇴직자·친인척 일감몰아주기 등 계약 비리
-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행위

- 공직유관단체 대상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속한 이행 협조(연중)

□ 국정 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집중 실시

- (공공인프라 분야) 원전, 문화재, 철도, 방위사업 등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관련 법령 모니터링·개선
- (국민생활 체감분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관행·고착화된 불편·부당사항과 부패유발요인 근절

□ 행동강령 위반 빈발분야 집중 개선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상반기, 권익위)
 - 연고관계에 기인한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
 - ※ 알선·청탁의 발생 형태와 관련, 출신지역·학교 등 연고관계에 의한 알선·청탁이 가장 빈발한다고 공직자의 35%, 국민의 27%가 응답('13.12월 권익위)

연고관계에 따른 직무회피 대상자 추가(안)

- ◆ 소속 기관 퇴직공무원(임직원)
- ◆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 채용시험, 출신학교 또는 지역을 통해 동기 또는 선후배 관계에 있어 친분이 있는 자
-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 테마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권익위)

-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제기된 행동강령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14년 행동강령 이행점검 주요 테마

- ◆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사용 실태 점검(국책연구기관)
 - : 국책연구기관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적정사용에 대한 국회 문제 제기
- ◆ 외부강의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중앙행정기관 등)
 - : 일부 공직자의 고액 강의료 문제가 사회 이슈화
- ◆ 국외활동 외부지원 실태 점검(지방의회)
 - : 지방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편법적 금전 지원 및 국외활동 다수 보도

- 공직사회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기관별 행동강령 취약 시기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및 직원 교육 강화**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적극 협조**
 - 행동강령 위반 통보 및 기관 자체 적발사항에 대한 **징계등 처벌 강화**
- 기관별 행동강령 취약분야 개선 및 운영 협조

□ **민간협력을 통한 분야별 반부패·신뢰 문화 확산**

- 민간단체 주도로 「청렴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반부패 프로그램 전개
 -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청렴성 강화, 반부패·청렴 의식 확산 및 민·관 협력 활성화 분야에 20여개 사업 지원('14.3~11)
- 공모사업 수범사례 확산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전파
- '공공·민간', '중앙·지역'간 참여·실천 중심의 반부패 민·관 협의체 구축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3.0 정부 구현
 - ※ 한국TI,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투명협, 공기업 등과 실무협의중('13.11~)
- 지역 반부패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유도
-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청렴 읍부즈만 등) 운영 지원

라. 부패취약분야의 근원적 제도개선

□ **비정상적 부패 관행 중점 개선**

- 민생관련 부조리, 예산낭비·누수,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고질적 부패취약분야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 기관 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으로 개선권고의 수용률·이행률 제고

□ **기(既)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로 제도개선 체감도 향상**

- 비정상적 부패 관행 개선, 예산낭비 방지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집중 점검 추진
- 권고과제의 명확한 이행근거 제시, 제도화 여부, 신속한 이행 등 실질적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마.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 체계 구축**

- 기관별 자체 접수처리 시 제보자정보 유출 사례 빈발로 각별한 주의 필요
 - 제보자 동의없는 **정보 유출 시 벌칙 규정**을 자체 지침에 마련
 - 감사부서 등 유관 업무자의 **신고자정보 유출 시 징계 강화** 등 엄정 조치
- 전 직원 대상 내부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제도 등 자체교육
- 각급기관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운영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 공익신고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운영 내실화(연중)
 -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접수·처리를 위한 **내부운영규정 마련**(조례·규칙 등),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운영**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
 - 공익신고 및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고자 비밀보장 준수 철저**
 - ※ 공익신고 처리에 있어 신고인(민원인)과 피신고인의 합의 유도 절대 주의
 - 기관별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임직원 대상 **교육 시행**(연 1회 이상)
 - ※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및 신고자 비밀보장 준수 등 교육자료 요청시 협조 예정
 - 공익신고제도 확산을 위한 자체 **홍보 추진**
 - ※ 영상물 표출, 포스터·리플릿 배포, 자체 캠페인 추진 등

바.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12년 모형을 전면 개편한 점을 감안, 측정모형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

- 하위조직별 평가 확대,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등을 통한 **평가 신뢰도 및 결과 활용도** 제고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 호의적 평가유도행위, 명부 누락·임의변경·중복 등 자료 불성실 제출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 명부 제출기한 미준수, 부패공직자 데이터 허위누락 제출에 대한 감점 신설

□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평가내용

- '3대 중점분야'에 대한 기관별 개선 노력 평가 강화
 -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를 위한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
 - ※ 복지 부정수급 방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유도 등
 -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상화를 통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 ※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등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등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개선
 - ※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활동 평가 확대
-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 등
- 자율적 반부패·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실적 평가
 - 「공공부문 부패방지시책 가이드라인」 시책 도입,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반부패 시책 개발 평가 비중 확대
 - ※ 수의계약 현황 및 자체감사결과 공개, 청렴자료 공유, 수범사례 도입 실적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평가대상 고위직의 업무환경 및 이해관계자 특성 등을 반영하여 향후의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모형으로 평가체계 개편
- 기관별 자율평가 추진
 - 새로운 진단모형 보급시까지 기존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활용한 기관별 자율평가 가능
 - 고위직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 또는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7월 이내 완료 또는 12월 이후에 실시

III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1. 경영환경 분석 및 주요 추진과제 도출

가. 경영환경 분석

- 대내 환경**
 - 청렴도평가 하락에 따른 기관 이미지 제고 필요성
 - 취약분야(예산 부당집행, 부당업무지시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요구
- 대외 환경**
 - 비정상적 정상화, 부패 척결 등 범정부적 반부패청렴정책 강화
 -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기준에 부합하는 공직자 청렴성 요구
 - 고위직 중심의 부패위험 진단 예방활동 강화

나. SWOT 분석을 통한 주요 추진과제 도출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의 강력한 청렴 의지 ○ 지속적인 반부패시책을 통해 청렴활동의 체계화 및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에 대한 조직내 업무부담 등 장애요인 ○ 내부 계층간 청렴인식의 차이 	W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성격상 부패개연성이 낮고 직원들의 높은 청렴의식 수준 ○ 반부패경쟁력평가 우수기관으로 향상을 통해 업무추진 동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인사/예산집행 등 업무투명성에 대한 직원 인식이 지속 하락 	T



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고위직 중심의 청렴 숭신수범 강화 ○ 효과적인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및 자율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자율 청렴추진체계 강화 	WO
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반부패인프라 강화 및 자율참여 활동 강화 ○ 자율적 반부패 제도개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고객만족 및 불편·애로사항의 적극 발굴·개선노력 경주 ○ 조직내 의견을 수렴하여 취약분야의 효율적 개선 추진 	WT



핵심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인프라 강화를 통한 청렴·윤리경영 구현 ○ 반부패·청렴 추진활동 인센티브 강화 ○ 부패 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 ○ 부패·비리신고 활성화 및 점검 강화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교육 활성화
-------	---

2. '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목표체계

2020
비전

신뢰받는 전력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부패없는 Clean KPX 구현]

2014
목표

청렴조직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 최우수기관 달성

추진
전략

- ▣ 부패방지 인프라 강화를 통한 청렴 윤리경영 구현
- ▣ 반부패·청렴 추진활동 인센티브 강화
- ▣ 부패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
- ▣ 부패·비리신고 활성화 및 점검 강화
-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 청렴교육 활성화

Feedback

국민권익위 청렴도 및 반부패경쟁력 평가 결과

IV 2014년도 세부추진계획

1. 부패방지 인프라 강화를 통한 청렴·윤리경영 구현

□ 반부패·청렴 추진체계의 유기적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최고경영진 및 노조 참여를 통해 윤리경영위원회 이행력 제고
 - 구성 : 이사장, 본부장, 처·실장 및 노조대표 및 사외 외부전문가
 - 운영 : 2014. 1 ~ 12월 (분기 1회 이상 개최)
 - 주요기능
 - 윤리경영 및 반부패 추진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윤리/청렴정책 추진 의결조율 및 다양한 의견 반영
- * 청렴옴부즈만 등 외부위원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 및 다양한 전문가 의견 반영 추진
- 반부패 실무추진반 운영 활성화
 - 구성 : 12명 (9개 처·실 및 윤리경영, 계약담당 등)
 - 반장(감사실장), 간사(감사차장),
 - 단원(본사 처·실별 주무차장급, 계약업무, 윤리경영 담당차장)
 - 운영 : 2014. 1 ~ 12월
 - 분기 1회 정기개최 및 실무현안에 따라 수시 개최하여 활용
 - 주요기능
 - 분야별 반부패·청렴 추진전략 및 시행방안 수립 지원
 - 부패취약업무 개선방안 도출 및 자율과제 이행실적 점검
 - 반부패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전파를 통해 직원 공감대 형성

□ 「부서별 청렴 leader」 선정·운영

- 목적
 - 반부패·청렴문화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부서별 청렴선도 역할
 - 30~40대 실무직원층의 청렴인식도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청렴업무 추진
- 주요역할
 - 반부패 추진계획 과제 발굴 및 개선의견 소통 창구
 - 비리·부정행위 상시점검 및 청렴 모니터링
 - 청렴정책 전파 및 부서별 윤리실천리더 역할 수행 등
- 구성 : 부서별 1명 (본사 처·실 10명, 지사 3명)
- 선정 : 부서별 추천 → 감사실 선정
 - 폭넓은 청렴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수렴을 위하여 4~8년차 직원 중심으로 우선 선정
- 운영 : 분기 1회 이상
- 참여활동별 청렴마일리지 및 우수활동자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 부여

□ 2014년 자체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시행

- 2014년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
 - 권익위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반부패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선정
- 자체 취약분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선과제 발굴
 - 2013년도 청렴도 평가 개선전략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반영
 - 반부패추진실무단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자율 개선계획 발굴

□ 「임직원 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제규정 정비

- 행동강령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행위기준 등 지속 보완
- 윤리헌장, 임원직무청렴규정 등 규정 체계 정비
- 부패 근절을 위한 징계기준의 지속 강화 및 부패발생시 엄격 적용
 - 징계양정기준상 10만원이상 능동적인 금품 수수시 해임토록 강화
 - 타사 벤치마킹 및 권익위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기준 보완
- 개정된 행동강령에 맞추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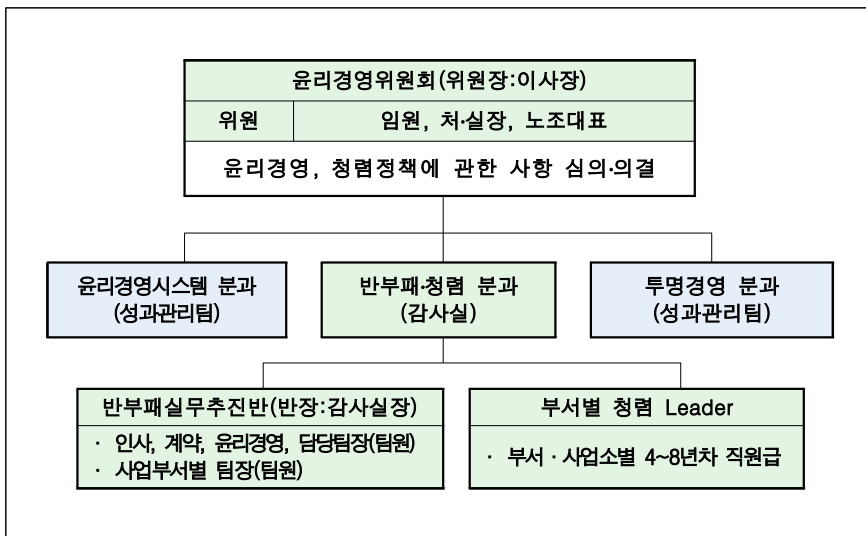
□ 반부패·청렴대책 이행 점검 강화

- 추진과제 및 실적에 대해 감사실에서 이행실태 지속 관리
- 반부패 청렴 추진실적의 내부평가 연계 관리
- 반부패실무추진단 및 윤리경영위원회에 이행실적 보고
 - 추진성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시 추진계획 보완 시행

□ 자체 윤리수준 진단 및 피드백

- 권익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시험평가 실시(2월)
 - 평가대상직위 : 본부장 및 본사 처·실장
 - 고위험도 직위에 대한 중점 점검 및 부패위험성 저감방안 마련
- 팀장급 간부 대상 자체청렴도평가 실시(5월)
 - 간부급의 청렴성 진단 및 솔선수범 유도
- 자체 윤리진단 설문, 취약분야 개선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주요 취약분야 사전과약 및 개선활동 반영(5월)

반부패·윤리경영 추진체계 및 조직



2. 반부패·청렴 추진활동 인센티브 강화

□ 「청렴·윤리경영 이행도」의 내부성과평가 반영

- 내부평가(BSC)에 별도 지표로 반영 및 운영범위 확대
 - 경영참여활성화 마일리지내 포함 지표로 평가하여 왔으나 지표 상한 점수 적용 등 변별력 부족으로 평가반영의 실효성 저하
 - 자율적 제도개선 및 청렴활동 참여 유도를 위하여 “청렴·윤리경영활동 이행 및 기여도”를 별도 평가지표로 분리하여 평가 반영 확대
 - 반부패경쟁력 기여도, 행동강령 위반행위 감점 등 청렴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운영기준 개선 및 팀별 BSC 평가 반영 비중 확대
- 추진일정
 - 2014 종합경영부문 지표 신설 반영 : 3월 (성과관리팀 협조)
 - 지표(청렴마일리지) 세부 운영기준 마련 : 4월
 - 지표 운영기준 안내 및 청렴 참여방안 제시 : 4월~
 - 청렴마일리지 운영실적 중간점검 및 발표 : 8월

□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강화

- 자체 감사시 반부패 수범사례 적극 발굴, 포상 반영 요청
- 윤리경영 및 청렴직원에 대한 모범직원상 수여(12월)
 - 청렴도, 공직기강, 봉사정신 등을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포상

□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강화

- 개인별 청렴마일리지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도화
 - 해외교육대상자 선발 등에 가점제 운영 검토
 -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추천 등 인센티브 부여 강화

3. 부패 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강화

□ 반부패 자율 개선과제 적극 발굴 및 추진

- 부서별 특성에 맞는 1부서(팀) 1청렴과제 발굴
 - 소관업무별 업무프로세스 점검 및 부패취약분야 과제 발굴
 - 부패취약분야 개선, 투명성 증진 및 청렴성 제고 등 각종 방안
 - 인사, 계약, 예산, 공사·사업관리 등 주요분야 과제 발굴 독려
 - 자율개선과제 및 부패영향평가(규정 개선) 대상항목 발굴 활용
- “반부패추진실무단 심의를 통해 우수 자율개선과제 선정
 - 선정된 자율 추진과제는 10월말 이전 이행 완료토록 독려
- 추진일정
 - 1팀 1개선과제 공모 : 4월
 - 반부패추진실무단 심의 : 5월
 - 추진과제 이행 점검 및 완료 : 8~10월

□ 부패영향평가 확대 실시 및 평가체계 강화

- 현행 내규 전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확대 실시
 - 부패유발요인인 행동강령 위반 발생분야, 청렴도 취약분야, 대외기관 지적사항 관련분야에 대한 규정을 우선 평가(4~7월)
 - 중점 분야 : 인사, 계약, 연구개발, 공사관리 등
 - 그 외의 내규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 실시(8~10월)
 - ※ 2015년은 지침, 매뉴얼 등 하위규정을 대상으로 확대
- 부패영향평가 체계 강화
 - 감사실 및 내규관리부서(성과관리팀)가 교차 평가 시행
 - 법무전문가를 활용한 부패영향평가 질적 향상 도모

부패영향평가 절차

- 입안부서에서 사규·정관의 제·개정(안)을 감사실 의뢰
 - 내규 제·개정(안)에 대한 부서협의로 부패영향평가 의뢰 절차에 같음
- 감사실은 평가절차에 따른 평가후 평가결과서 작성 통보
 - 평가모델 선정 및 유형별 체크리스트 및 평가결과서 작성
- 입안부서는 평가결과서 반영여부 결정 통보 및 제·개정(안)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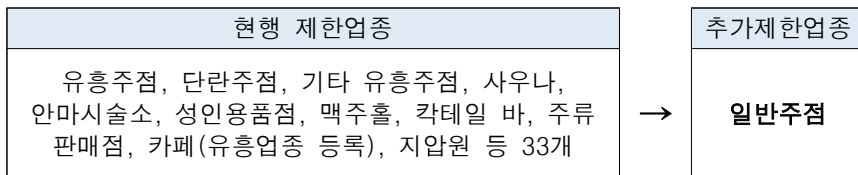
□ 외부고객 “불만제로 kpx” (Happy Call) 활동 전개 (4월~)

- 계약관련 불만 해소 및 공정 계약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계약전별 로 업체의 불만족사항 및 애로사항 파악 등 점검 (감사실)
 -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 관련항목이 아닌 불만족/애로사항을 파악
 - 조사대상 : 계약체결업체
 - 조사시기
 - 계약만료업체 : 계약만료 당월 또는 익월
 - 계약시행업체 : 6개월이상 장기계약인 경우 1차 기성고 지급익월
 - ※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 포함
- 접수된 불만·애로사항에 대해 해당부서 통보하여 시정·개선 요구 및 사후 관리
 -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 발견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

□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강화

- 클린카드 사용 제한업종 및 구매제한 특정물품 운영 강화

【클린카드 제한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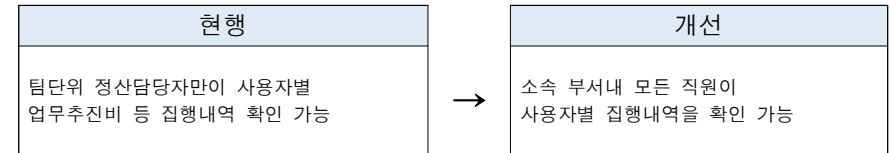
【구매제한 특정물품】

현행 제한업종
골프용품, 귀금속류, 양주 등 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액세서리류 등 6개 품목

- 법인카드 실명제 운영 : 매출전표 실명 기재 및 보관
- 휴일, 원거리 등 예외적 사용 해당시 객관적 증빙 첨부 의무화
- **음주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제한**
 - 공식 행사 등의 제한적 용도 외의 호프, 맥주, 카페 등에서의 음주용도로의 사용 금지
 - 맥주, 호프, 비어 등 명칭을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소명 의무화
 - ※ 일반주점인 맥주, 호프 등의 업소는 제한업종으로 카드승인 불가

□ 법인카드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 모니터링 도입

- 부서별 법인카드 집행내역에 대해 소속부서내 전 직원에게 공개
 - 부서별 자율 모니터링 실시로 투명한 예산 집행 유도



- 추진일정
 - 사용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 (e-감사시스템 기능 개선) : 5월중

4. 부패·비리신고 활성화 및 점검 강화

□ 내부신고 익명신고제 (Help-line) 운영 강화

- 외부전문기관 및 청렴옴부즈만에 신고접수를 위탁하여 내부신고 활성화
 - Red Whistle 시스템 : IP추적 불가, 외국소재 서버 등 보안으로 익명신고 보장
- 안내홍보물 배포 및 사내교육 등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 적극 안내
- 접수된 비리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강화를 통해 조직 Risk 확대 방지
- 시기 : '13. 7월 ~ 운영중
- 소요예산 : 3백만원/년

□ 사전예방적 청탁 방지 및 부패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및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교육 실시(연중)
 -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 부서별 순회교육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준수로 불이익 사전예방(연중)
 - 신고자 신분공개, 부패신고로 인한 징계·전보 등 불이익처분 금지 등

□ 예산낭비신고센터 신설 및 신고자 인센티브 운영방안 마련

- 부패행위 외의 예산낭비, 불법지출, 예산절감방안 등 신고창구 신설(6월)
 - 자체신고센터 구축 및 권익위 등 유관기관 신고센터 배너 설치
 - 신고·제안자에 대한 포상·인센티브 부여기준 마련 (9월)

□ 행동강령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효율화 (연중)

- 법인카드 집행, 외부강의 신고 상황 등 모니터링 강화
 - 법인카드 특이집행, 신고사항 누락 등 리스크 사전 발굴 및 관리
- e-감사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상시모니터링 효율화 추진(5월~)
 - 외부강의 신고관련 공문누락, 근태처리 여부 등 확인기능 보완
 - 특이점검 및 조치결과 관리 등 기능 개선 및 직원 이용 편의 제고
 - * 상시 모니터링외의 사업소 정기감사 또는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통해 주기적 행동강령 이행점검 실시(연 6회)

5.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CEO 청렴·윤리경영 실천의지 표명

- CEO의 윤리·청렴특강 주기적 실시 (반기별)
- CEO 주도의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출선수범(3월, 9월)
- 반부패 청렴관련 캠페인, 강연 및 토론회 참석(연중)
- CEO의 윤리·청렴의지 사내전파
 - 인사철 청탁 배격, 선물 안주고 안받기, 취약시기 청렴 캠페인 전개
 - 확대간부회의, e-Message 등을 통해 기관장의 청렴 의지 전달

□ 고위직 간부 청렴 실천서약 확대 시행

- 서약대상 : 팀장급 이상 간부보직자 전원
- 서약시기 : 간부 보직발령 1개월 이내
- 서약방법 : 인트라넷 이용 On-line 서약 (전자서명 연동)
 - 대상자별 서약참가여부는 전 직원 인트라넷 활용 조회가능
- 서약내용 : 「임직원 행동강령」 중 공정한 직무수행 등 8개 항목
 - 불합리한 업무지시,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이권개입·금품수수, 경조사 통지기준 위반, 경조금품 수수제한 및 골프 등 사행성 오락 금지, 간부로서의 품위 유지 등

□ 승격인사시 청렴서약제 시행

- 운영시기 : 정기 승격인사시
- 서약방법 : 인트라넷 이용 On-line 서약 (전자서명 연동)
- 서약내용
 - 인사 청탁,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 승격과 관련한 부당행위 금지

□ 부서·사업소별 매월 「청렴의 날」 운영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운영

○ 운영방법

- 감사실에서 매 월별 청림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
- 팀 단위로 전 직원이 토의 및 결과 제출(매월 말일)
 - “청림마당”의 청림활동 사례공유방에 게시
- 활동실적에 대해 팀별 청림마일리지 부여
 - 참여 : 건당 5점, 우수사례 채택시 10점 부여
 - 우수사례는 사내·외 공유 및 전파

구분	사내	사외
공유방법	굿모닝kpx 웹진 게시	홈페이지내 윤리경영활동 게시 기관간 협력활동시 사례 공유

- 우수사례 선정은 부패방지 자율과제 또는 자체 개선과제로 활용가능 여부로 판단 (동일과제가 중복 제출시 모두 인정)

[월별 청림의날 활동주제]

구분	월별 활동 주제	비고
4월	부서별 취약분야 개선과제 발굴	
5월	여비 등 운영비 부당 사용 방지 방안	
6월	법인카드 부당사용 방지 방안	
7월	부당업무지시 근절 방안	
8월	취약시기(휴가철)	
9월	행동강령의 구체화 또는 실효성 제고방안	
10월	취약분야 자율 개선과제 이행 점검	
11월	관행적·일상적 비리 방지방안	
12월	2015년 반부패·청림 향상을 위한 Idea	

□ 사내 청림 경진대회 “제2회 kpx 淸涼際” 개최

○ 목적

- 부서/팀별 자율 청림활동 촉진 및 참여 확대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청림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공유 추진을 통한 반부패활동 활성화

○ 추진방안

구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상반기	청림 아이디어 공모 - 취약업무 중점 개선방안 (인사, 예산부담집행, 부당업무지시)	4월
하반기	청림 수기·활동사례 경진대회 - 부서별 자체 시행한 청림도 제고활동 사례 - 부패취약업무 프로세스 개선, 제도화 실적 등	9월

○ 심사방법

- 청림슬로건 및 청림아이디어 공모 : 반부패실무추진단 심사
- 청림 수기·활동사례 경진대회 : 반부패실무추진단 및 윤리경영위 심사

○ 우수 공모작에 대해 사내외 홍보 및 개인/부서포상 시행

□ 청림 포탈사이트 “청림 마당” 운영 활성화

- 청림마당 : 청림관련 메뉴를 통합하여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 구성 메뉴 : 청림윤리방(청림 관련시책 및 홍보자료),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 시스템, 내부신고, 금지금품 처리공개, 행동강령 FAQ, 업무기준, 감사지적 사례 등
- 청림활동실적 공유방 신설
 - 부서별 월 1회 “청림의 날” 활동 실적을 공유토록 하여 청림실천 지원

□ 청림 회의시간제 (Clean Meeting Time) 운영 강화

- 목적 : 직무관련자와의 회의시 청탁 및 항응 제공 방지
- 운영방안
 - 계약업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회의/상담시 중식 또는 석식시간으로 연결 되지 않은 시간대에 개최
 - 오픈 공간에서 회의/미팅 개최를 원칙
- 추진일정
 - 청림회의시간제 운영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및 사내외 홍보(6월)
 - 청림회의시간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 (회의실 사용기록 등)
 - 위반시 소명자료 제출 및 필요시 청림마일리지 감점 적용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지속 강화

- 공개대상 및 공개정보 확대

구분	연차별 공개범위 확대			비 고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공개대상	이사장 및 본부장	부서장급 이상	팀장(1직급) 및 지사장 이상	
	3	9		
공개정보	집행자, 집행일자, 사용금액, 용도		집행장소, 대상자 (추가)	

- 공개주기 : 월별 시행
- 공개방법 : 사외 홈페이지 게시
- 공개정보 및 공개주기 준수
 - 처·실, 사업소별로 집계하여 집행일월 말일까지 감사실로 자료 제출

□ 청림 우수기관 등과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 대상 기관 : 청림 우수기관 및 신규 평가대상 기관
- 협력 분야
 - 청림도 개선방안, 인센티브 운영 등 제도 개선사례 벤치마킹
 - 청림 콘텐츠 공유, 청림교육 등 반부패활동 공동 추진
 - 벤치마킹 사례는 우리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 후 시행

□ 전 직원 대상 매월 청림 자가진단 및 청림서약 시행

- 운영시기 :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
- 운영방법
 - 인트라넷 상에서 자가진단 응답 및 청림실천 서약
 - ※ 청림 자가진단항목 추가 개발 활용(5월중)

□ 건전·청림 조직문화 캠페인 전개

- 건전화식문화 119(1가지 술로 1자리에서 9시이전 종료) 캠페인 활동
 - 과도, 상습적인 음주 회식문화로 인한 기강해이, 부당예산사용 등 방지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의 날” 준수 독려
 - 매주 목요일 정시퇴근 및 법인카드 사용 금지

6. 청림교육 활성화

□ 직급별 “KPX 청림순례단” 운영

[간부 대상]

- 내용 : 청림유적지(사표) 탐방 및 취약분야 청림도 향상방안 도출
- 대상 : 팀장급이상 간부 30명
 - 40명 × 1회 / 1박2일
- 시기 : 6월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시기 조정)
- 예산 : 600만원
 - 예산과목 : 교육훈련비/현장교육비(윤리경영/성과관리팀)

[일반직원 대상]

- 내용 : 대표적 청림유적지(사표) 탐방 및 청림문화 토론, 다짐
- 대상 : 취약업무 담당자, 신규승진자, 고객접점부서 근무자 중심 40명
 - 40명 × 1회 / 1박2일
- 시기 : 11월
- 예산 : 600만원
 - 예산과목 : 교육훈련비/현장교육비(윤리경영/성과관리팀)

[신입직원 대상]

- 내용 : 대표적 청림유적지(사표) 탐방 및 청림문화 토론, 다짐
- 대상 : 신입직원 20명
 - 20명 × 1회 / 1박2일
- 시기 : 11월
- 예산 : 300만원
 - 예산과목 : 교육훈련비/현장교육비(윤리경영/성과관리팀)

□ 부서별 찾아가는 청림교육 실시

- 2014 자체 청렴추진방안 및 반부패시책 평가제도, 청탁등록제 등 안내
- 부서별 방문교육 : 연중 실시
 - 부서별/사업소별 “청렴의 날 “ 월별 행사시 감사실 주관, 방문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행동강령 개정사항, 클린카드 부당사용 방지방안 등
 - 청탁등록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 처리요령 안내
 - 2014년 반부패·청렴추진계획 안내 등

□ 매주 온라인 행동강령 퀴즈를 통해 행동강령 인지도 제고

- 운영시기 : 매주 금요일(마지막 주 제외)
- 운영방법
 - PC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행동강령 퀴즈 게시
 - 총 12편으로 회당 5문항을 순환하여 운영
(퀴즈 콘텐츠는 '13년 6편, '14년 6편 추가 개발)
 - 개인별 퀴즈 참여 여부 및 성적을 공개하여 참여도 및 관심도 제고

□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렴·윤리교육 주기적 실시

- 사이버 청렴교육, 전 직원 집합교육, 현장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방식	교육과정명	대상	회수	시기
On-line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 교육	전 직원	연1회	6~10월
	행동강령 퀴즈	전 직원	주1회	매주 금요일
Off-line	CEO 윤리경영 교육	전 직원	연2회	5,9월
	청렴현장교육	간부 신입직원	연1회	5월
	새내기(신입직원) 청렴교육	신입 및 인턴직원	채용시	4월
	사외전문가 초청 특강	전 직원	연1회	11월
	반부패·청렴전문가 과정	담당자	수시	수시

- 인당 교육이수목표 : 전 직원 20시간 이상

□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강화

- 교육목적 : 고위직의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리더쉽 확립
- 교육과정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고위직 교육과정 활용
- 교육대상 : 상임임원 우선 시행
 - 비상임이사 및 부서장급까지 교육 참여 확대(권익위 대상자 선정 협의)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내실화 (연중)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 신규임용, 승격자, 간부보직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관리
 - ※ 내부성과평가 지표에 이행도를 반영하여 자율적 교육이수 독려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기준

대상	신규임용자	3직급 이상 승격자	팀장이상 보직자 (임원포함)
목표	청렴을 내면화하여 청렴초심을 유지	승격 후에도 부패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공직에 몰입	사회지도층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유지
시간	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승격 후 1년 이내 10시간	해당보직 진입시부터 1년 이내 5시간
내용	공직자의 기본자세, 행동강령 주요내용 등	주요 부패사례, 윤리적 갈등상황 및 대처방안 등	노블레스 오블리제 제고, 이해충돌상황 대처법 등
교육방법	기관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등		

- 취약분야 보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 계약, 인사, 회계, 기반기금사업관리 업무 보직자에 대해 보직후 1년 이내 청렴교육 의무 이수
- 대상자별 교육과정 운영 및 이행 내실화 방안 강구
 - 의무이수제 이행 점검 및 인센티브 적용(청렴마일리지 가감점 반영)
 - 권익위 청렴교육원 전문과정 참여 확대, 청렴교육 전문업체 과정 활용 등

V | **실행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부서
1. 부패방지 인프라 강화를 통한 청렴·윤리경영 구현		
□ 반부패·청렴추진체계의 유기적 구축 및 운영활성화	연중	감사실/성과관리팀
□ 부서별 청렴 leader 선정 운영	4월~	감사실/전 부서
□ 2014 자체 반부패·청렴추진계획 수립·시행	연중	감사실
□ 임직원 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제규정 정비	연중	감사실/성과관리팀
□ 반부패·청렴대책 이행점검 강화	연중	감사실
□ 자체 윤리수준 진단 및 피드백	5월	감사실/성과관리팀
2. 반부패·청렴 추진활동 인센티브 강화		
□ 「청렴·윤리경영 이행도」의 내부성과평가 반영	3월	감사실/성과관리팀
□ 윤리경영/반부패청렴 우수직원 포상 강화	12월	감사실/인력개발팀
□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강화	6월~	감사실/성과관리팀
3. 부패 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강화		
□ 반부패 자율 개선과제 적극 발굴 및 추진	4~10월	감사실/전 부서
□ 부패영향평가 확대 실시 및 평가체계 강화	4~10월	감사실/성과관리팀
□ 외부고객 “불만제로 kpx” (Happy Call) 활동 전개	4월~	감사실
□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강화	3월	감사실/재무관리팀
□ 법인카드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 모니터링 도입	5월~	감사실
4. 부패 비리신고 활성화 및 점검 강화		
□ 내부신고 익명신고제 (Help-line) 운영 강화	연중	감사실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부서
□ 사전예방적 청탁 방지 및 부패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연중	감사실
□ 예산낭비신고센터 신설 및 신고자 인센티브 운영방안 마련	6, 9월	감사실
□ 행동강령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효율화	3월~	감사실
5.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CEO 청렴·윤리경영 실천의지 표명	연중	감사실
□ 고위직 간부 청렴 실천서약 확대 시행	5월~	감사실
□ 승격인사시 청렴서약제 시행	12월	감사실
□ 부서·사업소별 매월 「청렴의 날」 운영	4월~	감사실/전 부서
□ 사내 청렴 경진대회 “kpx 清涼際” 개최	4,9월	감사실/전 부서
□ 청렴 포탈사이트 “청렴 마당” 운영 활성화	4월~	감사실/전 부서
□ 청렴회의시간제(Clean Meeting Time) 운영 강화	연중	감사실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지속 강화	연중	감사실/전 부서
□ 청렴 우수기관 등과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5월~	감사실
□ 전 직원 대상 매월 청렴 자가진단 및 청렴서약 시행	연중	감사실
□ 건전·청렴 조직문화 캠페인 전개	연중	감사실
6. 청렴교육 활성화		
□ 직급별 “KPX 청렴순례단” 운영	연중	감사실/성과관리팀
□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연중	감사실
□ 온라인 행동강령 퀴즈를 통해 행동강령 인지도 제고	연중	감사실
□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렴·윤리교육 주기적 실시	연중	감사실/성과관리팀
□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강화	4, 6월	감사실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내실화	연중	감사실